

명지대 SSK 중형단계  
제 7 차 월례발표회

대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정당  
연계 모델과 사회통합

일시: 2017년 03월 30일 오후 16:00~18:00  
장소: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미래정치연구소(2805호)

주최: 명지대 SSK 지역 다양성과 사회통합 연구단  
주관: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명지대 미래정치연구소 SSK 연구단(2017)

- 지역 다양성과 사회통합 -

연구과제명: “대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정당 연계  
모델과 사회통합”

- 제7차 월례발표회 -

□ 발표 주제

해외 사례 국가의 정치·정당·민주주의 동향 및 쟁점

□ 발표자

김진주·김소정·정승희·이순영·정현영·최민지(명지대)

□ 참석자

연구책임자 : 윤종빈(명지대 미래정치연구소장)

공동연구원 : 정회옥(명지대), 박경미(전북대), 유성진(이화여대),  
장승진(국민대), 한의석(성신여대), 한정훈(서울대)

전임연구인력 : 정수현(명지대), 박지영(명지대)

연구보조원 : 김진주·김소정·정승희·이순영·정현영·최민지(명지대)

□ 일시 및 장소

일시: 2017년 03월 30일 (목) 오후 16:00-18:00

장소: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미래정치연구소(2805호)

## [발표 주제]

해외 사례 국가의  
정치·정당·민주주의 동향 및 쟁점

## 동유럽 동향 개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김소정

폴란드에서는 지난 2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경쟁 정당인 시민연단의 지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Warsaw Voice 2017/03/12). 한편 여당인 법과정의당(Prawo i Sprawiedliwość, PiS)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지방정부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Gazeta Wyborcza 2017/03/06; Warsaw Voice 2017/03/06 재인용). 공공문제연구소(Institut Spraw Publicznych, ISP)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2%는 이념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답했으며, 44%는 중도 보수라고 응답해 폴란드의 청년층이 주로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rsaw Voice 2017/03/08). 한편 제1야당인 시민연단(Platforma Obywatelska, PO)을 비롯한 야당들이 현 법과정의당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폴란드 정치권이 들쭉이고 있다(Warsaw Voice 2017/01/23).

헝가리의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 총선을 앞두고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의 최측근이 거대 미디어 그룹의 큰 지분을 확보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AP통신 2017/03/04; 연합뉴스 2017/03/04 재인용). 또한 오르반 총리는 망명을 신청한 난민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경지대 수용시설에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통과시켰으며, 세르비아 국경지대에 제2의 난민장벽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DPA통신 2017/03/17; 연합뉴스 2017/03/17 재인용). 한편 헝가리의 좌우 진영 모두에서 오르반 총리의 4선을 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AFP통신 2017/03/12; 연합뉴스 2017/03/12 재인용). 또한 아테르 야노시(Ader Joanos) 대통령이 야권 단일후보를 누르고 연임에 성공했다(AFP통신 2017/03/12; 연합뉴스 2017/03/13 재인용).

체코에서는 정책연구소인 민주주의연구소21(Institute for Democracy 21)이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는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praguemonitor 2017/03/10). 3월 10일에는 여당인 사회민주당(Česká Strana Sociálně Demokratická, ČSSD)의 전당대회가 열렸으며, 당대표 선거 결과 보후슬라프 소보트카(Bohuslav Sobotka) 총리의 재선이 확정되었다(praguemonitor 2017/03/10). 한편 상원의원들은 현행 정당 국고보조금제도가 군소정당에 불리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praguemonitor 2017/03/23).

## 동유럽 주요 동향

### 【폴란드】

03월 02일

- 2월 여론조사 결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해

(Warsaw Voice, 03.02)

- 여론조사기관인 'Kantar Public pollster'에서 2월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법과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3%포인트 하락해 33%에 머무른 반면, 경쟁 상대인 시민연단의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해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대폴란드당(Nowoczesna)에 대한 지지율은 1%포인트 하락해 8%대에 머물러 쿠키스15(Kukiz'15)와 유사한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유권자의 20% 정도가 "지지할 정당을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03월 06일

-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 늘고 있어

(Gazeta Wyborcza 03.06, Warsaw Voice 03.06 재인용)

- 일간지인 가체타 비보르차(Gazeta Wyborcza)에 따르면 여당인 법과정의당의 지방선거제도 개혁 계획에 대해 지방정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 200여 명의 하원의원이 모였으나, 법과정의당대표인 야로슬라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등 여당의 핵심 인사들은 불참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소선거구제를 폐지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 추진내용은 언론들을 통해 언급되었으나, 이에 대해 여당은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여론조사기관인 CBOS(Centrum Badania Opinii Społecznej)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 인사들의 임기를 2회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폴란드인의 50%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반대하는 응답 또한 4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03월 08일

- 폴란드의 청년층 주로 중도 보수 성향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Warsaw Voice, 03.08)

- 폴란드의 공공문제연구소가 15세부터 2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2%는 이념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했으며,

44%는 중도 보수라고 응답했다. 반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8%였으며 중도 좌파라는 응답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폴란드 청년층의 과반은 좌파보다 우파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체적인 정당 지지를 물었을 때는 반체제적(anti-establishment) 정당인 쿠키스15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현대폴란드당, 여당인 법과정의당, 시민연단이 뒤따랐다.

03월 09일

- 폴란드 극우 집권당 몽니... 자국출신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의장 연임 반대

(Financial Times 03.08, 문화일보 03.09 재인용)

- 헌법재판소 권한 제한법과 언론 취재 제한법을 밀어붙여 국내외 반발을 불렀던 폴란드 극우당 정부가 이번에는 자국 출신인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연임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 투스크 의장이 그동안 극우당 정부의 행보를 민주주의 역행이라고 비판해왔던 것에 대해 보복에 나선 것이다. 8일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연임에 도전하는 투스크 의장에 대해 "자국 정부를 불법적으로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지지했다"고 비난하며 연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베아타 슈드워(Beata Szydlo) 폴란드 총리는 9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투스크 의장은 (폴란드) 국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중립성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투스크 의장의 연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투스크 의장이 폴란드 정권을 장악한 법과정의당 행보에 대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시도라며 비판해왔기 때문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03월 20일

- 폴란드의 야당,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Warsaw Voice, 03.20)

- 폴란드의 제1야당이자 친 유럽연합(EU)적인 노선을 보이고 있는 시민연단이 공식적으로 현 베아타 슈드워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진행할 것이며, 총리후보로 현 시민연단 당대표인 그제고즈 쉐티나(Grzegorz Schetyna)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단의 한 관계자는 "우파 정부가 폴란드를 유럽연합(EU)밖으로 끌어내려한다"며 "세계무대에서 폴란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최근 정부가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연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의 독선적인 행보들을 지적하였다. 한편 폴란드는 투스크 상임의장의 재선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국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연단은 법과정의당이 집권한

이래로 폴란드의 위상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권력 축소 논란, 여론 통제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불신임 투표 계획에 대해 진보정당인 현대폴란드당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당 (Polskie Stronnictwo Ludowe, PSL) 또한 시민연단과 함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불신임 투표는 회기 시작일인 4월 5일 이전에는 실시될 수 없다. 한편 여당인 법과정의당이 460개의 의석 중 과반인 234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불신임 투표가 성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 【헝가리】

03월 04일

- 총선 앞둔 헝가리, 총리 측근 미디어 '큰손' 등장

(AP통신 03.04, 연합뉴스 03.04 재인용)

- 내년 총선을 치르는 헝가리에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측근이 최대 미디어 기업의 지분을 대거 확보했다. 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헝가리 미디어 그룹 오피무스(Opimus)는 뢰린츠 메자로스(Lőrincz Mészáros)가 지분 16.9%를 인수했다고 전날 밝혔다. 오피무스는 지난해 10월 헝가리 최대 미디어 기업인 미디어웍스(Media Works)를 인수했다. 당시 미디어웍스는 재정적 이유를 들며 좌파 성향의 헝가리 최대 일간지인 넵사바드사그(Nepszabadsag) 발행을 갑작스럽게 중단해 논란이 됐는데 넵사바드사그 발행 중단 후 총리 측근이 미디어웍스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작은 도시의 시장을 지내기도 했던 메자로스는 오르반 총리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기업인으로 성공을 거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도 에코 TV와 몇몇 케이블 채널, 대담 채널 등을 인수했다. 에코TV 전 소유주는 방송사를 넘기면서 메자로스가 방송을 통해 우파 정부 정책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오르반 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둬 네 번째 총리직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측근들의 미디어 인수는 선거 정국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03월 12일

- 헝가리 좌우 진영, 현 총리 4선 저지 공감 확산

(AFP통신 03.12, 연합뉴스 03.12 재인용)

- 유럽 보수 우파의 대표 정치인 중 한 명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좌우 진영 모두에게서 거센 공격을 받아 네 번째 총리 직에 오르는 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AFP통신이 12일 전했다. 헝가리는 13일 의회에서 상징적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한다. 아데르 야노시 현 대통

령은 5년 전 단독 출마해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야당 단일 후보인 라즈로 마즈테니(László Majtényi)와 경쟁해야 한다. 마즈테니는 사회당과 다른 5개 좌파 성향의 군소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정당이 단일 후보를 낸 것은 처음이다. 한편 야권이 내년 총선에서 사회당이 총리 후보로 지명한 라요시 보트카(László Botka)를 지지할지도 관심사다. 그는 야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르반 총리와 막상막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극우 정당인 요빅(Jobbik Magyarországért Mozgalom, Jobbik)의 가보르 보나(Gabor Vona) 대표 또한 오르반 총리를 위협할 수 있는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다. 38세의 젊은 정치인인 그는 '극우'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이민을 제한하려는 오르반 총리의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 03월 13일

- 헝가리 대통령, 야권 단일후보 누르고 연임 성공

(AFP통신 03.13, 연합뉴스 03.13 재인용)

- 헝가리 의회는 13일 아데르 야노시 현 대통령을 임기 5년의 차기 대통령으로 재선출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아데르 대통령은 전체 199표 중 131표를 얻어 39표 득표에 그친 야권의 단일 후보 라즈로 마즈테니 전 방송위원장을 누르고 연임에 성공했다. 처음 대통령에 선출될 때는 단일 후보로 출마해 표결 없이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야권 후보와 경선을 했다. 현지 언론들은 마즈테니 전 방송위원장이 큰 표 차이로 지기는 했지만, 소수 정당으로 분열된 중도 및 좌파 진영을 한데 묶었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헝가리 제1야당인 사회당(Magyar SZocialista Párt, MSZP)은 내년 총선에서 소수 정당과 연대해 의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선거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네 번째 총리직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03월 15일

- 헝가리 총리 국경일 연설 때 시위대 호루라기 향의

(AFP통신 03.16, 연합뉴스 03.16 재인용)

-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15일 국경일 기념 연설을 하는 동안 수백명의 야당 지지자들이 밖에서 호루라기와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향의 시위를 벌였다고 AFP통신과 현지 언론들이 16일 전했다. 15일은 헝가리가 1848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혁명 기념일이다. 오르반 총리는 수도 부다페스트의 국립박물관 야외에서 기념 연설을 했는데 그의 반 유럽연합(EU), 반 난민 정책 등을 비판하는 시위대가 박물관 담 밖에서 호루라기를 불고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 경찰은 애초 이



들의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하루 전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시위대의 호루라기와 경적 소리 때문에 연설 행사장 주변에서는 잠시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르반 총리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네 번째 총리직에 도전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로 강하게 추진한 부다페스트 올림픽 유치가 유권자 단체의 반대 운동으로 무산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03월 17일

- "유럽연합(EU)은 실패했다" 난민 억류하고 장벽 또 세우는 헝가리

(DPA통신 03.17, 연합뉴스 03.17 재인용)

- 난민 사태에 대해 헝가리가 점점 더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 유럽연합(EU) 내에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 17일 독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은 모든 망명 신청 난민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경 지대 컨테이너 수용 시설에 억류할 수 있도록 한 법에 최종 서명했다.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까지 강제로 억류할 수 있게 한 이 법은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여당이 다수인 의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8일 뒤 효력을 띠게 됐다. 유럽연합(EU)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망명 신청 난민을 특정 시설에 강제 억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헝가리는 일사천리로 법안을 밀어붙였다. 한편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또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세르비아 국경 지대에 짓는 제2의 난민장벽이 5월 중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체 코】

03월 03일

- 체코의 정치인들 항상 믿을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praguemonitor, 03.03)

- 의정감시단체인 데마고그(Demagog)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코의 정치인은 거의 거짓말을 하진 않지만 종종 의심스럽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발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TV토론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50명의 정치인이 제기한 7500건의 주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데마고그는 분석 결과, 주장의 60%만이 검증가능하고 신뢰할만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체코의 이러한 상황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03월 10일

-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소의 새로운 움직임

(praguemonitor, 03.10)

- 다가올 2018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 웹사이트 플랫폼인 'President 21'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까지 약 6만 명의 사람들이 사이트에서 500명이 넘는 후보자들을 제안했으며,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다. 이러한 행사를 주최한 민주주의연구소21은 정책연구소로, 전국적으로 유권자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03월 10일

-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사회민주당 당대표 재선 성공해

(praguemonitor, 03.10)

- 오늘 오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렸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총리는 대의원의 67%의 지지를 획득해 당대표직 재선이 확실시되었다. 투표결과 내무장관인 밀라네 초바네크(Milan Chovanec) 또한 본래 직위였던 당의 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명 연설에서 소보트카 총리는 사회민주당이 계획했던 정책들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다음 내각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민민주당(Občanská Demokratická Strana, ODS)과 긍정당(Akce Nespokojených Občanů, ANO)이 힘을 합하면 현 내각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민주당원들에 경고했다.

03월 23일

- 상원의원들, 정당보조금제도에 대한 불만 제기

(praguemonitor, 03.23)

- 상원의원 18명이 헌법재판소에 현행 정당보조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현행 보조금 제도가 군소정당에 불리한 반면 거대정당은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에 한해 연간 6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내용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3%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유일한 보상은 한 표당 100코루나(약 4달러)라는 점이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2003년에도 헌법재판소에 불만이 제기된 사례가 존재한다. 한편 불만을 표출한 의원들 중 대부분은 군소정당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 폴란드 정부의 행보와 야당의 반발

현재 폴란드 정치권의 화두는 법과정의당 정부에 대한 야당들의 내각 불신임 추진이다. 제1야당인 시민연단을 중심으로 현대폴란드당, 국민당 등 야권은 정부의 여러 과오들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내각 불신임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Warsaw Voice 2017/03/20).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집권한 이래로 끊임없는 잡음을 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헌법재판소의 임명권을 본래의 배분보다 많이 행사하려고 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했으며, 의회 내 취재를 제한하는 등 민주주의 후퇴를 야기하는 행보를 지속했다. 이에 유럽연합(EU)에서는 폴란드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Financial Times 2016/07/27; 연합뉴스 2016/07/28 재인용).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점은 여당이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지방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Gazeta Wyborcza 2017/03/06; Warsaw Voice 2017/03/06 재인용). 또한 그동안 폴란드 출신인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정부의 행보를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투스크 의장의 연임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논란이 되었다(Financial Times 2017/03/08; 문화일보 2017/03/09 재인용). 결과적으로 투스크 의장의 연임은 성공하였으나 폴란드는 투스크 의장의 재선 선거에서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국가로 기록에 남았다(Warsaw Voice 2017/03/20).

집권 초기부터 이어져 온 폴란드 정부의 이러한 행보들을 나열하며 야권은 내각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제1야당인 시민연단은 당내에서 총리 후보까지 지명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Warsaw Voice 2017/03/20). 폴란드 헌법 158조에 따르면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하원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 법과정의당이 460개의 의석 중 과반인 234석을 차지하고 있어 불신임 투표가 성공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Warsaw Voice 2017/03/20).

그러나 내각 불신임이 무산되더라도 폴란드 정부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법과정의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정부의 행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야당들의 반발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폴란드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러한 의견을 통해 정부는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연합뉴스. 2016.07.28.

문화일보. 2017.03.09.

Financial Times. 2016.07.27.

\_\_\_\_\_. 2017.03.08.

Gazeta Wyborcza. 2017.03.06.

Warsaw Voice. 2017.03.06.

\_\_\_\_\_. 2017.03.20.

## 유럽의회 동향 개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이순영

유럽의회 본회의는 2017년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스트라스부르에서 진행되었다. 이달 본회의에서는 공동방위의 문제, 총기지침 규제의 수위를 높이는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s 2017/03/17). 공동방위 문제에 대해서 유럽의회는 유럽방위청(European Defence Agency, EDA)의 필요성과 상시 구조적인 협력계획(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을 탈퇴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영국은 이 군사적 연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s 2016/03/16).

유럽의회 내 중도우파이자 다수당인 유럽국민당그룹(European People's Party, EPP)은 과격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이미 유럽연합(EU) 출입국 승객 정보 처리(The Passenger Name Records, PNR), 테러집단의 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 테러 피해자에 대한 지원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이 외에도 유럽연합(EU) 회원국 사이에 정보 교환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EPP Group Press Releases 2017/03/15). 또한 유럽국민당그룹과 유럽의회의 중도좌파인 유럽사회당그룹(Socialists & Democrats, S&D)은 총기 지침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지지하면서 기존의 총기규제법의 법적인 허점을 메우는 동시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총을 소유하고 사냥을 즐기거나 스포츠로 사격을 즐기는 사람들의 권리 또한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EPP Group Press Releases 2017/03/14; S&D Press Releases 2017/03/14).

한편 3월 15일에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자유당(Partij Voor de Vrijheid, PVV)가 제 1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기존 의석에 5석을 추가하는데 그쳤고 중도보수 성향의 자유민주당(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 VVD)이 제1당 자리를 지켰다(국민일보 2017/03/16). 이번 네덜란드 총선 결과로 인해 극우 포퓰리즘 세력의 돌풍을 우려했던 유럽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조선일보 2017/03/17). 대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중도파 에마뉼엘 마크롱(Emmanuel Macron)후보가 극우파 마린 르펜(Marine Le Pen)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경제 2017/03/21).

지난 3월 22일에 영국 런던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번 런던 테러의 동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런던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번 테러로 3명의 사망자와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연합뉴스 2017/03/26). 다음 달 유럽의회 본회의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유럽의회 정당】**

03월 07일

- 유럽사회당그룹, 헝가리에서의 망명 신청자의 구금은 비인간적일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다.

(S&D Press Releases, 03.07)

- 유럽사회당그룹은 헝가리 의회의 망명 신청자 구금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헝가리 의회는 헝가리로 들어오는 모든 망명 신청자들과 현재 헝가리에서 망명 평가를 기다리고 이들을 헝가리 남쪽 국경에 있는 개조된 컨테이너에서 구금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헝가리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유럽사회당그룹은 헝가리 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놀랐으며 유럽연합(EU) 법과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특히 유럽사회당그룹의 부의장인 타냐 파온(Tanja Fajon)은 헝가리 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유럽연합(EU)의 가치와도 상충하는 것이며 헝가리 의회의 이러한 조치는 아이와 여성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사는 남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03월 09일

- 피텔라와 비센티니(Pittella and Visentini): 브렉시트(Brexit)는 수백만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다.

(S&D Press Releases, 03.09)

- 영국 하원은 Article 50(유럽연합(EU) 탈퇴와 관련된 유럽연합(EU)의 법조항)이 효력을 발휘된 후에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3백만의 유럽연합(EU) 국적의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표를 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파트너들은 하원의 결정과 Article 50이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사회당그룹의 피텔라와 비센티니는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수백만 시민들의 삶을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국민들의 삶이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영국 국민과 유럽연합(EU) 국민은 브렉시트 협상에서 상호 동일한 권리와 삶과 일을 보장 받아야 하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국민과 유럽연합(EU) 국민이 동일한 권리와 삶의 수준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유럽 단일 시장법과 유럽연합(EU)의 규범이 잘 연결되는 수준에서 영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깊은 경제적, 사회적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03월 14일

- 유럽국민당그룹은 총기규제에 관한 균형 잡힌 동의를 지지한다.

(EPP Group Press Releases, 03.14)

- 유럽국민당그룹은 균형 잡힌 총기규제법에 관한 동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기지침법 개정은 법적으로 소유가 허용된 총기가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또한 불활성화 된 총을 다시 활성화할 수 없도록 하고 총기에 대한 추적 가능성과 관련된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더 나아가 총기에 대한 추적가능성을 높여서 국가 경찰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총기와 관련된 지침의 법적인 허점을 고치고자 했다. 또한 유럽국민당그룹의 총기지침 협상자인 안나 마리아 코라차 빌트(Anna Maria Corazza Bildt)는 사냥꾼들과 스포츠로 사격을 즐기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부분을 제거했다는 부분에서 자랑스러움을 느껴하며 새로운 총기지침이 기존의 효과적인 총기규제법을 유지하면서도 불완전한 시스템의 차이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03월 15일

- 브뤼셀 공격 이후 1년, 유럽국민당그룹은 유럽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EPP Group Press Releases, 03.15)

- 유럽국민당그룹은 브뤼셀 테러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과격한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았다. 특히 파리 테러 이후 테러와 싸우기 위한 10개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것 중 6개는 이미 달성했다. 유럽연합(EU)으로 출입국 하는 승객 정보 처리를 위한 법률(PNR)을 제정하고 테러집단의 자금조달을 막고 테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외에도 더 안전한 유럽을 위해서 유럽연합(EU) 회원국 사이의 정보 교환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고 출입국을 관리하는 현대적인 지능형 기계를 사용할 필요성을 있음을 제기했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 유럽연합(EU)의 범죄기록 시스템의 활용과 불법 총기의 밀매를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

03월 16일

- 유럽국민당그룹은 유럽 국가들이 유럽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

(EPP Group Press Releases, 03.16)

- 유럽국민당그룹은 지금은 공동방위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전략적인 자주권과 통합,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각 국가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상시 구조적인 협력계획(PESCO)은 일정한 수준의 군

사력을 갖춘 국가들에게 군인들을 같이 교육하고 군사 인프라를 서로 활용하는 등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적 능력을 최대화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며 결과적으로 군비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의 공동방위는 특별히 우리가 미래에 어떤 종류의 연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유럽연합(EU)이라는 체도를 더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했다.

## 【유럽의회 선거 · 의회】

03월 02일

- 유럽의회,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IS) 잔혹사진 기자에 보낸 르펜 면책특권 박탈

(연합뉴스, 03.02)

- 유럽의회는 3월 2일에 마린 르펜에 대한 면책특권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프랑스의 대권 후보이자 유럽의회 의원이기도 한 르펜은 2015년 그녀가 속한 국민전선(Front National, FN)을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한 프랑스 TV 기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이슬람국가(IS)의 잔혹행위를 담은 사진을 보냈다. 이에 프랑스 경찰은 르펜 후보에게 폭력적인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조사를 요구했으나 면책특권을 내세워 조사를 거부해왔다. 이번 면책특권 박탈 의결으로 인해서 르펜은 트위터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면책특권 해제 범위는 단순히 트위터 사건에만 국한되며 르펜 후보가 의회 보좌진을 고용하면서 공공기금을 유용했다는 별도 조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03월 15일

- 미풍 그친 네덜란드 트럼프(Trump), 유럽 극우 주춤

(국민일보, 03.16)

- 네덜란드 총선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자유민주당(VVD)이 제 1당 자리를 지켰다. 네덜란드의 트럼프라고 불리던 헤이르트 빌더르스(Geert Wilders)의 네덜란드 자유당(PVV)은 기존 의석에 5석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오히려 진보 진영의 예시 클라버(Jesse Klaver)의 녹색좌파당(GroenLinks, GL)이 기존 의석에 10석을 추가하며 제 5당으로 올라섰다. 유럽연합(EU) 탈퇴, 반(反)이슬람, 반(反)난민 기조로 모스크 폐쇄, 난민 거부 등의 공약을 쏟아냈던 네덜란드 자유당의 실패는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유권자의 반발을 이끌어낸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잇따라 선거를 치르게 될 이웃 유럽 국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에 대한 찬성표이자 극단주의에 대한 반대표"라고 해석했다. 유럽을 지배하던 극우 정당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이번 선거의 결과가 오는 4월과 9월 열리는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03월 16일

- 방어: 의원들은 회원국들에게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고 군대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s, 03.16)

- 공동방어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은 유럽에서 더 긴밀한 공동방어는 법적인 고려사항보다는 정치적 의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방위청(EDA)와 상시 구조적인 협력계획(PESCO)은 특수한 기구로 다루어져야하고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료이사회(EU Council of Ministers)와 공동방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방어부서를 설립하고 유럽방위청(EDA)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와 자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상시 구조적인 협력계획(PESCO)을 통한 공동방어가 군과 시민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유럽연합(EU)이 위기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회원국들에게 가능하면 빨리 상시 구조적인 협력계획(PESCO)에 가입할 것을 종용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GDP의 2퍼센트 정도를 국가방어 비용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비용은 유럽연합(EU)의 공동방위에 대한 조사와 발전, 전략적 협력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03월 17일

- 3월 회기: 안전한 음식, 점차 녹고 있는 만년설, 사라지지 않을 편견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s, 03.17)

- 2017년 3월 회기에서는 안전한 음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되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한 논의가 같이 진행되었다. 동시에 여성들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가 강조되었고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던 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이 개발도상국에서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들에게 자금 지원을 축소하면서 대부분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이 이러한 비영리단체들에게 자금지원을 해줄 것에 대해 요구했다. 또한 리스본 조약에서 유럽 공동 방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이미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럽 공동 방위를 위한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를 세울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동방위는 유럽 군대 간의 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회원국가의 군용품 조

달 과편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는 2016년 3월 22일에 일어난 브뤼셀 테러의 피해자를 추모하면서 유럽연합(EU)의 극단주의자의 명단과 범죄기록과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 파리 테러공격의 여파로 제기된 더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는 총기지침이 승인되었다.

03월 20일

● 프랑스 대선 TV전쟁 시작...정면충돌한 마크롱-르펜

(아시아경제, 03.21)

- 현지시간 20일에 치러진 프랑스 대선 후보 간 첫 TV토론에서 중도파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파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후보가 정면충돌했다. 마크롱 후보는 르펜이 프랑스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르펜은 마크롱의 중도주의 정책이 프랑스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공격했다. 또한 공화당 후보인 프랑수아 피용(Francois Fillon) 전 총리는 자신이 당선되면 프랑스의 국가 재건을 일구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후보들로부터 최근 스캔들과 부도덕성에 대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첫 토론회의 명확한 승자와 패자는 없지만 마크롱 후보가 가장 선방했고 이어서 르펜과 피용 후보 순으로 잘했다고 꼽았다. 이런 가운데 TV토론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마크롱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르펜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여론조사기관 엘라브(Elabe)가 예상한 1차 대선투표 득표율은 마크롱이 25.5%, 르펜은 25%, 피용은 17.5%로 나타났다. 프랑스 대선후보들은 다음달 4일과 20일에 두 번의 TV토론을 더 할 계획이다. 여전히 40%의 프랑스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TV토론이 여론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메일(Globe and Mail)은 분석했다.

**【유럽의회 여론】**

03월 23일

●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담한 런던 시민들은 공격 이후 직장으로 돌아간다.

(Telegraph, 03.23)

- 테러의 위협에 저항하는 런던 시민들은 테러가 그들의 정신을 망가뜨리거나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없다고 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런던 시민들은 트위터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테러에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런던 시민들은

테러 공격의 중심지가 된 런던 시내로 두려움 없이 일하러 돌아가고 있다.

03월 23일

- 런던테러 다음날 벨기에서 차량테러 시도, 피해 없어

(연합뉴스, 03.24)

- 벨기에 북부도시 안트워프(Antwerp)의 쇼핑 거리에서 23일 오전에 차량을 이용한 테러 시도가 발생했다. 북 아프리카계 인물로 프랑스 국적을 가진 한 남성이 쇼핑가에서 차량을 몰고 행인들에게 질주했지만 다행히 행인들이 모두 피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이 탔던 승용차에서 칼과 소총 등이 발견되었다.

03월 26일

- 런던테러에 단 82초 걸렸다, 단독 범행 결론, 동기는 미궁

(연합뉴스, 03.26)

- 2017년 3월 22일, 브뤼셀 테러 1주기에 런던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런던 테러범인 칼리드 마수드(Khalid Masood)는 시속 60km로 다리 230m를 질주하여 3명을 목숨을 앗아가고 한국인 5명을 포함한 50명을 다치게 했다. 런던테러 이후 이슬람국가(IS)는 우리 전사가 이번 공격을 했으며 배후를 자처했다. 게다가 마수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자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가 극단주의 세력의 지령을 받고 이번 테러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영국 경찰은 런던 테러의 동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번 테러가 범인 칼리드 마수드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논쟁과 유럽의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2017년 3월 14일 유럽의회는 총기지침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종류의 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총기를 국가시스템에 등록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총기관련 정보를 유럽연합(EU) 국가 내에서 교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s 2017/03/14). 총기지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유럽의회의 활동은 최근 3년 내에 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테러사건, 특히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과 관련이 있다(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s 2017/03/14; Euobserver 2017/03/15).

2015년 11월 18일, 처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Union Commission)가 이 법안을 의제화 하였고 법안을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왔다. 특히 의회는 집행위원회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회 주최의 공청회와 유럽사회 총기 수집가 재단(The Foundation for European Societies of Arms Collectors, FESAC)과 유럽국민당그룹, 유럽보수개혁(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Group, ECR), 자유민주당그룹(Alliance of Republicans and Democrats for Europe, ALDE)이 함께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서 총기지침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왔다. 두 번째로 열린 공청회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사회 총기수집가재단 의장 스테판 페트로니(Stephen A. Petroni)를 통해 "유럽연합(EU)이 테러를 명분삼아 무기 수집가들이 총기 규제의 범위 안에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총기규제가 테러를 막는데 실효가 있는지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들었다(Euobserver 2017/03/15).

이번 법안이 표결되기 직전까지도 자유민주당그룹(ALDE)은 이번 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총기 판매를 허용하면서 총기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기 소유자들의 권리만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ALDE Group News 2017/03/08). 하지만 법안은 통과되었고 이후 유럽국민당그룹과 유럽사회당그룹은 이번 법안이 기존의 총기규제법의 허점을 바로잡는 동시에 사냥꾼들과 스포츠로 사격을 즐기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법이 만들어졌다고 법안의 승인을 환영했다(EPP Group Press Releases 2017/03/14; S&D Press Releases 2017/03/14).

지난 3년간 유럽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들을 고려해본다면 총기지침에 관한 규제는 환영받을만하다. 또한 난민으로 위장해서 유럽 내 입국한 이슬람국가(IS)요원들로 인한 잠재적 테러에 대한 공포가 유럽인들에게 난민은 곧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확산시킨다(김춘식 2016)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될만하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고 이를 조정

하기 위해서 유럽의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3월 14일에 그 결과물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통과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법안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총기 규제라는 논쟁적인 사안을 합의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의회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참고문헌

ALDE Group News 2017.03.08.

EPP Group Press Release 2017.03.14.

Euobserver 2017.03.15.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s 2017.03.14

S&D Press Releases 2017.03.14.

김춘식. 2016. "유럽 난민문제와 독일 극우주의의 부활." 『독일연구』 33호, 153-186.

## 미국 동향 개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정현영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연합뉴스 2017/03/26) 내에서 의견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던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고(월스트리트저널 2017/03/12; 연합뉴스 2017/03/13 재인용),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등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하면서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merican Health Care Act, AHCA)'의 의회 통과가 무산되었다(연합뉴스 2017/03/25).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의원이 트위터에 "탄핵 준비 태세"라는 글을 올렸는가 하면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민주당 상원의원은 불명예 퇴진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7/03/21).

임기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활은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예정이다. 우선 반(反)이민 행정명령 관련 법정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하와이 주(州) 연방지방법원과 메릴랜드 주(州)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3월 15일과 16일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 효력 발동을 임시 중지한다고 차례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2017/03/18). 또한 백악관이 제출한 2018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이 의회에서 초안대로 살아남을지 의문인데다(경향신문 2017/03/17), 공화당 상원 내부에서 '세제 개혁안(tax reform bill)' 속 일부 조항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상원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2017/03/26).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 지지자, 남성, 백인의 이탈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향신문 2017/03/23). 또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연합뉴스 2017/03/20). 제임스 코미(James Comey)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국장이 오바마(Barack Obama) 도청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갖고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러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경향신문 2017/03/23).

## 미국 주요 동향

### 【미국 정당】

03월 12일

- 미국 공화당서 '보호무역정책' 반발 기류 확산

(월스트리트저널 03.12, 연합뉴스 03.13 재인용)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던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짐 인호프(Jim Inhofe)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하여 농업이 주력 산업인 지역구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 방침에 불만스런 모습이다. 지역구의 수출 감소를 우려하는 것이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과세 정책이 수출품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03월 21일

- 미국 민주 의원 "탄핵 준비태세"...'트럼프 탄핵론' 다시 고개 드나

(연합뉴스, 03.21)

- 지난 2월 호아킨 카스트로(Joaquin Castro) 민주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문제 삼아 불신임과 탄핵 절차를 밟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트럼프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탄핵 준비 태세"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워터스 의원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도청 주장이 사실상 근거 없음으로 결론 나고, 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당국 간의 부적절 접촉, 즉 내통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으로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일부 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는 역풍을 우려해 탄핵과는 거리를 둔 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사과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탄핵 대신 불명예 퇴진 가능성을 거론했다.

03월 24일

- '트럼프케어' 표결철회로 사실상 폐기...트럼프 리더십에 큰 타격

(연합뉴스, 03.25)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하면서 '트럼프케어(AHCA)' 처리에 필요한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하자, 하원의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이를 전격으로 철회했다. 그간 프리덤 코커스를 비롯한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무늬만 폐지"라는 비판을 해 왔고, 중도 성향의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들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과반이 넘는 237석을 확보하고도 자력으로 '트럼프케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트럼프케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03월 26일

- '위기의 트럼프' 다음 시험대 세계개혁안도 힘로...여권 자중지란  
(연합뉴스, 03.26)
  - 이제 취임 두 달을 갓 넘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자신의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후속 수정명령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데 이어 '트럼프케어(AHCA)'가 미국 하원에서, 그것도 공화당 내부의 반발로 좌초되면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은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사안들이 즐비하다는 데 있다. 당장 '세계 개혁안'의 의회 처리부터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세계 개혁안'의 핵심이자 최대 쟁점은 수입품에는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국경세'를 신설하는 것인데, 공화당 상원 내부에서 이 조항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일각에선 상원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는 10명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고, 데이비드 퍼듀(David Perdue) 의원 역시 퇴행적인 '국경세'는 소비자들에게 타격이 되고 경제성장세도 끌어내린다고 일갈했다.

## 【미국 선거 · 의회】

03월 05일

- '도청 주장' 트럼프에게 자충수 될까... "러 스캔들 오히려 부각"  
(Washington Post 03.05, 경향신문 03.06 재인용)
  -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 정권 초기 '러시아 스캔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권을 끌어들이며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2월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이 러시아 내통 의혹 속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보좌관 자리에서 낙마한 데 이어 제프 세션스



(Jeff Sessions) 법무장관도 '러시아 인사 접촉' 위증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도청 카드'를 내밀었지만 도청 주장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이 '물 타기' 성격이 짙다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 개입 논쟁과 관련해 더 정밀한 조사를 촉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원의 감청 승인을 받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도청이 이뤄졌다면 미국 사법당국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러시아 내통'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를 잡고 감청까지 동원한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03월 16일

- 군대, 장벽 선택하고 '소프트파워' 희생...트럼프식 '볼드모트 예산안'

(경향신문, 03.17)

- 백악관이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정부예산 중 행정부에 재량권이 있는 1조2090억 달러를 대상으로 짠 것이다. 트럼프가 외치던 위대한 미국의 해법은 군사력이었다. 외교, 환경, 교육, 복지 등 '소프트파워' 예산을 30%까지 깎고 국방, 국토안보 예산을 크게 늘려 '하드 파워'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는 국방 예산을 10% 늘린 5740억 달러로 편성하고,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이민자 단속·추방을 위한 인력을 늘리는 데 사용될 국토안보부 예산도 전년도보다 28억 달러(6.8%) 늘렸다. 반면 국무부 예산은 28.7%나 감소한 271억 달러로 편성되었고, 노동부, 농업부는 20.7%, 보건복지부는 16.2%, 교육부는 13.5%가 삭감됐다. 이러한 예산안이 의회에서 초안대로 살아남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3월 13일, 예산안에 멕시코 장벽 예산이 포함되면 연방정부 '셋다운'도 감수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던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의 예산 삭감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할 로저스(Hal Rogers) 공화당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예산의 삭감내용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03월 17일

- 트럼프 행정부, 반(反)이민 수정명령 효력정지에 또 항소

(동아일보, 03.18)

- 트럼프 행정부가 메릴랜드 주(州)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고며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이라크를 제외한 이슬람권 6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간 금지하고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와이 주(州) 연방지방법

원과 메릴랜드 주(州)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3월 15일과 16일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 효력 발동을 임시 중지한다고 차례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미국 여론】

03월 19일

- '끝없는 추락'...트럼프 지지율 37% 최저치 또 경신

(연합뉴스, 03.20)

-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취임 직후에는 45%로 긍정평가와 동일한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5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지지율 변화의 배경에는 오바마케어(Obama Care)를 폐지·대체하는 공화당의 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AHCA)'에 대한 반대여론과 계속된 반(反)이민 행정명령 관련 법정싸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03월 22일

- 트럼프 핵심 지지층도 이탈 시작...WSJ, '가짜 대통령' 판정 경고

(경향신문, 03.23)

- 트럼프 당선의 기반이 됐던 핵심 지지층 이탈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응답자의 경우 지지율이 91%에서 81%로 10%포인트, 남성 응답자는 49%에서 43%로 6%포인트, 백인 응답자는 49%에서 44%로 5%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이러한 이탈 현상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트럼프가 정직하지 않다고 답했고, 55%는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와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자주 근거 없이 발언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2%는 매우 자주, 21%는 다소 자주 그렇다고 답했다.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오바마 도청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갖고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 '탄핵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했던 탄핵의 목소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도청 허위 주장 논란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계기로 민주당 일각에서 힘을 얻고 있다(연합뉴스 2017/03/21).

공화당 소속의 데빈 누네스(Devin Nunes) 하원 정보위원장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타위를 도청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한 데 이어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증거를 제시하라는 압박에 나섰다(동아일보 2017/03/17). 또한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이 청문회에서 미국 연방수사국의 러시아 대선 개입 인정 사실을 부인하고, 오바마가 트럼프를 도청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정통성과 신뢰성(경향신문 2017/03/21)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 역시 좋지 못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성공여부를 가늠 짓는 잣대 중 하나인 신뢰성(박성진 2003)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유권자의 60%가 트럼프를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Politico 2017/03/22), 56%가 트럼프 선거캠프 인사와 러시아 정부의 유착 관계에 대한 특별 조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olitico 2017/03/08). 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합이 저해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3%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미국 내 증오와 편견이 확산됐다고 답했다(동아일보 2017/03/10).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직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여론조사기관인 젠포워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의 57%가 트럼프 대통령을 "정당성이 부족한 대통령"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The Hill 2017/03/18).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트위터에 "탄핵 준비 태세"라는 짧은 글을 올리는 등 '트럼프 탄핵론'이 대두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21).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확산되고 있는 미국 내 증오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통합 정책 구상에 힘써야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오바마 도청과 같은 자극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을 자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경향신문. 2017.03.21.

동아일보. 2017.03.10.

\_\_\_\_\_. 2017.03.17.

연합뉴스. 2017.03.20.

\_\_\_\_\_. 2017.03.21.

Politico. 2017.03.08.

\_\_\_\_\_. 2017.03.22.

The Hill. 2017.03.18.

박성진. 2003. "한국 사회 신뢰의 악순환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동향과전망』 통권 58호, 7-40.

## 일본 동향 개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정승희

일본의 여당과 야당은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중도 퇴위를 두고 의견을 조율한 끝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연합뉴스 2017/03/17). 일본 양원의 의장과 부의장은 3월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아카히토 일왕에 한해 중도 퇴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의 견해를 전했다며, 특별법은 6월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연합뉴스 2017/03/17). 또한 일본 정부는 3월 21일 공모죄 구성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여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17/03/21).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아베 신조 정권의 폭주라고 비난하며 저지 방침을 밝혔고, 시민단체들은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 논란을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2017/03/21).

한편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총재의 임기를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늘리는 당칙 개정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교도통신 2017/03/05; 연합뉴스 2017/03/05 재인용). 만약 아베 총리의 총재 임기인 2018년 9월까지 아베 총리에 대적할 경쟁가가 없다면 아베 총리는 3년 더 총리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교도통신 2017/03/05; 연합뉴스 2017/03/05 재인용).

이처럼 아베 총리는 최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아키에 스캔들'로 3연속 재임에 비상이 걸렸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安倍昭惠)가 명예교장을 맡았던 오사카의 '모리토모 학원'이 부지를 헐값에 매입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교도통신 2017/03/20; 연합뉴스 2017/03/10 재인용). 또한 모리토모 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이 "아키에 여사로부터 아베 총리가 보낸 100만엔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23). 이러한 논란과 증언에 대해 아베 총리와 아키에 여사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민진당의 렌호(蓮舫)대표는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수상의 기부가 사실이라면 수상은 사임을 결정할 만하다고 주장하였고 야당은 가고이케 이사장과 아키에 수상부인의 국회 소환을 재차요구하고 있다(교도통신 2017/03/16).

'아키에 스캔들'에 휘말린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낮아진 56%로 집계되었다(요미우리신문 2017/03/20; 연합뉴스 2017/03/20 재인용). 또한 교도통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신조 수상이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각 문제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2.5%였으며 문제의 경위에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82.5%였다(교도통신 2017/03/26).

## 일본 주요 동향

### 【일본 정당】

03월 05일

- 아베 최장기 집권 길 열렸다…일본 여당, 총재임기 연장 정식 결정  
(교도통신 03.05, 연합뉴스 03.05 재인용)
  -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총재 임기를 현행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당칙 개정을 정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는 당 총재 3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으며 당선되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치르고 2021년 9월까지 장기 집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임기는 2018년 9월까지지만 그에게 대적할 만한 경쟁자가 없는 가운데 현재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 3년 더 총리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2006~2007년 1차 집권 당시를 포함해 재임일이 3천일을 넘기면서 최장수 재임 총리로 기록될 수 있다.

03월 05일

- 일본 야권, '아베 임기연장·개혁추진' 강력 비판  
(연합뉴스, 03.05)
  - 민진당 등 일본 야권은 5일 아베 신조 총리가 9년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한 당대회에서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개혁보다 보육 문제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우선하라"고 비판했다. 민진당의 렌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의 개혁초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아베 총리가 일절 답을 하지 않으며, 다른 장소에서는 개혁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자민당 내에서는 (총재 임기 연장) 절차가 이뤄졌어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베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03월 06일

- 일본 여당서 4월 국회 해산설…아베, '전쟁가능국' 변신 앞당기나  
(산케이신문 03. 06, 연합뉴스 03.06 재인용)
  -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당 규정 개정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 올해 4월 중의원 해산설이 부각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지난달 중순 복수의 당 간부와 직원에게 중의원

조기 해산에 따른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초 하반기로 예상되던 총선거가 상반기에 실시된다면 개헌 추진 일정도 그만큼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 내에서 이처럼 조기 중의원 해산설이 확산하는 것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인기 상승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현재 여론은 아베 총리에게 우호적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가 관련돼 이른바 '아키에 스캔들'로 불리는 국유지 헐값 매각의혹에 대한 여론은 싸늘한 편이어서 아베 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03월 16일

- 일본 민진당 대표 "모리토모 기부 사실이면 수상 사임해야"

(교도통신, 03.16)

- 민진당의 렌호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오사카시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 초등학교를 둘러싸고 이사장 퇴임 의향을 보이는 가고이케 야스노리 이사장이 아베 신조 수상으로부터 기부금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수상은 의원을 그만둔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수상은 2월 1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인가와 국유지 가격 인하에 대한 관여를 부정해 "나와 아내, 사무소가 관여돼 있다면 수상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렌호 대표는 회견에서 가고이케 이사장의 국회 초치를 재차 요청했다. "수상은 가고이케 이사장이 있는 앞에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03월 27일

- 일본 야당, 아키에 수상부인 국회 소환 재차 요구

(교도통신, 03.27)

- 일본 여·야당은 27일 오사카시의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를 평가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격화했다. 민진당 등 야당은 참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문제의 진상 해명을 위해 아베 아키에 수상 부인의 증인 소환을 요구했지만, 막 내리기를 서두르는 여당은 거부할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예산위에서 자유당 모리 유코(森裕子) 의원은 "모리토모 문제는 아키에 부인도 관여됐다. 증인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 아베 수상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거절했다. 민진당의 사쿠라이 미쓰루(桜井充) 의원은 "직원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딱한 일이다. 해명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지적해, 국회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 【일본 선거 · 의회】

03월 10일

- 아베, '9년 집권' 길 뚫지만…잇따른 악재에 '곤혹'

(교도통신 03.10, 연합뉴스 03.10 재인용)

- '최장수 총리'의 길을 만들어 놓은 아베 신조일본 총리가 잇따라 터진 악재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장을 맡았던 오사카 한 학교법인의 초등학교 부지 헐값 매입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는데 이어 내각 인사가 실언으로 낙마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지난 5일 열린 자민당 대회에서 내년 9월인 당총재 임기를 2021년 9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당규정을 바꿨지만, 악재가 이어지면서 내년 당총재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3월 17일

- 일본 국회 "특별법으로 일왕퇴위"…아베 "신속히 법안 제출"

(연합뉴스, 03.17)

- 일본 국회가 아키히토 일왕의 중도 퇴위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일본 국회 양원인 참의원과 중의원의 의장과 부의장은 17일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 중도 퇴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국회 '견해'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했다. 다만 '왕위 계승은 황실전범(皇室典範·왕위 계승 방식을 규정한 법률)에 따른다'는 헌법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황실전범의 부칙에 '특별법은 황실전범과 같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퇴위 후 일왕의 지위와 호칭 등을 포함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왕의 중도 퇴위가 앞으로 선례가 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일본 국회는 이날 정리한 견해에서 퇴위와 관련한 법 정비 이후 '여성궁가(宮家)'의 창설 문제를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특별법은 6월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2019년 1월에 왕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03월 20일

- 아키에 스캔들로 궁지 몰린 일본 아베 '내달 총선거' 카드 쓰나

(산케이신문 03.20, 연합뉴스 03.20 재인용)

- '아키에 스캔들'에 의한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 신조일본 총리가 조만간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다음달에 곧바로 총선거를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이 4월 총선론을 거듭 제시한 것은 아베 내각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아키에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의 돌풍이 커지며 7월로 예정된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참패가 예상된다. 이 경우 우익들이 개헌을 실현시킬 유일한 정치인으로 꼽는 아베 총리의 입지는 더 좁아진다. 자민당 내에서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아키에 스캔들이 한창인 상황에서 의회를 해산하면 자칫 스캔들을 피해 도망쳤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지율 하락이 가파른 상황이어서 조기총선으로 선수를 치기에는 벌써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

03월 21일

- 일본, 테러대책법 각의 의결...야당·시민단체 "아베 폭주" 반발

(연합뉴스, 03.21)

- 일본 정부는 21일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여당은 현재 소집된 통상국회(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진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는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며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모죄의 적용 대상을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정했다. 조직적 범죄집단은 테러 조직이나 폭력단, 마약 밀수조직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일본변호사연맹 등은 "범죄 주체가 테러조직 등으로 한정됐다고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시민단체나 노조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그동안 지적했다.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는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공모죄는 위헌이다", "아베 신조 정권의 폭주를 막아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개정안 저지를 다짐했다.

## 【일본 여론】

03월 14일

- 일본 아베 연임에도 빨간불...지지율·3연임 찬성론 동반하락

(마이니치신문 03.14, 연합뉴스 03.14 재인용)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부인 아키에 여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으로 3연임에 비상이 걸렸다. 자민당은 지난 5일 당대회를 열고 내년 9월인 당총재 임기를 2021년 9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당 규정을 바꿨지만, 잇단 악재가 내년 당총재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1~12일 전국 유권자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총리의 3연임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45%, 반대하는 의견은 41%로 4%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3연임에 대한 찬성 여론이 줄어든 것은 그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둘러싼 '아키에 스캔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03월 20일

- 일본, 아베 지지율, 아키에 스캔들에 10%p 급락...47%까지 떨어져  
(요미우리신문 03.20, 연합뉴스 03.20 재인용)
  - 부인 아키에 여사의 비리 사학 연루 스캔들에 휘말린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지지율이 한달 사이 10%p포인트나 급락했다. 지지율은 여전히 40~50%대의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단기간에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이 18~19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17~19일 조사 때에 비해 10%p포인트나 낮아진 56%로 집계됐다. 지지율 하락폭은 '아키에 스캔들' 이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을 보여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크다. 이달 들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여론조사를 주관한 언론사에 따라 5~8%p포인트 하락했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사람의 비율은 9%p포인트 늘어난 33%였다. 지지율 하락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 사이에서 특히 컸다. 무당파의 아베 내각 지지율은 45%에서 33%까지 수직으로 하락했다.

03월 26일

- 일본 여론, 수상 해명 "납득 못해"62%..."부인 국회증인 유치" 52%  
(교도통신, 03.26)
  - 교도통신사가 25,26일 이틀간 실시한 전국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사카시의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수상이 아베 아키에 수상 부인을 포함해 관여를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응답이 62.6%였다. '납득할 수 있다'의 28.7%를 크게 웃돌았다. 아키에 부인을 국회에 증인으로 유치해 설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52.0%. 국유지가 헐값에 매각된 문제의 경위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82.5%에 달해,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의 10.7%를 크게 웃돌았다. 학원 이사장직 퇴임을 표명한 가고이케 야스노리 씨가 국회에서 증언한 수상으로부터 100만 엔의 기부에 관해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수상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응답은 58.7%였다. '이해할 수 있다'는 30.2%. 아키에 부인의 국회 증인 심문 유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42.8%였다.

## '아키에 스캔들'과 아베 내각 지지율 하락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당 총재의 임기를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늘리는 당칙 개정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는 당 총재 3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교도통신 2017/03/05; 연합뉴스 2017/03/05 재인용). 따라서 아베 총리의 현재 당 총재 임기는 2018년 9월까지이나, 아베 총리에게 대적할 경쟁자가 없다면 3년 더 총리를 하여 최장수 재임 총리로 기록 될 수 있다(교도통신 2017/03/05; 연합뉴스 2017/03/05 재인용). 이처럼 아베 총리는 9년 집권이라는 최장수 총리의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잇따라 터진 '아키에 스캔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장을 맡았던 오사카의 모리토모 학원의 부지가 헐값에 매입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모리토모 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 이사장이 3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키에 여사로부터 100만엔을 기부 받았다고 주장하여 아베 총리 내각은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되었다(마이니치신문 2017/03/23; 연합뉴스 2017/03/23 재인용). 이에 아베 총리와 아키에 여사는 부지 헐값 매입 의혹과 100만엔 기부금 제공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24).

그러나 증폭되고 있는 논란인 '아키에 스캔들'에 관하여 야당과 여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한 상황이다. 민진당의 렌호 대표는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 모리토모 학원의 기부금 문제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수상은 의원을 그만둔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할 만하다"라고 지적하며 기부가 사실일 경우 수상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교도통신 2017/03/16). 또한 민진당 등의 야당은 참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아키에 수상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교도통신 2017/03/27). '아키에 스캔들'로 인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총리의 3연임에 대한 찬성여론이 줄어들었다(마이니치신문 2017/03/14; 연합뉴스 2017/03/14 재인용). 또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에 비해 10%포인트 낮아진 56%로 집계되었으며,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밝힌 비율이 늘어났다(요미우리신문 2017/03/20; 연합뉴스 2017/03/20 재인용). 여론의 62.6%가 아베 총리와 아키에 수상 부인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응답했다(교도통신 2017/03/26).

정치 불신은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과 국민들 간의 신뢰는 중요한 요소이다(김윤실 외 2013).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키에 스캔들'은 아베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베 내각과 국회는 정치 불신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

지하기 위해 투명한 진상규명으로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연합뉴스. 2017.03.05.  
\_\_\_\_\_. 2017.03.05.  
\_\_\_\_\_. 2017.03.14.  
\_\_\_\_\_. 2017.03.20.  
\_\_\_\_\_. 2017.03.23.  
\_\_\_\_\_. 2017.03.24.  
교도통신 2017.03.05.  
\_\_\_\_\_. 2017.03.05.  
\_\_\_\_\_. 2017.03.16.  
\_\_\_\_\_. 2017.03.26.  
\_\_\_\_\_. 2017.03.27.  
마이니치신문. 2017.03.14.  
\_\_\_\_\_. 2017.03.23.  
요미우리신문. 2017.03.20.  
김윤실 · 박병훈 · 윤종빈. 2013. "어떤 유권자가 투표하는가?-제 18대 및 제 19대  
총선 분석."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6권 1호: 143-171.

## 대만 동향 개관

명지대 중어중문학과 학부생 최민지

2016년 5월 20일 출범한 대만의 14대 정부는 대만의 첫 여성 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이 이끌고 있다.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立法院)의 의석수는 총 113개로 민진당(民進黨)이 68석으로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Kotra 2017).

대만 문화부는 국민당(國民黨) 정권에 의한 학살사건인 2·28 사건 70주년과 계엄령 해제 30주년을 맞아 중정기념당에서 장제스(蔣介石)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을 뼈대로 하는 용도 변경안을 마련 중이다(연합뉴스 2017/02/27). 2·28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차이정부의 입장이다(연합뉴스 2017/02/27). 이러한 중정기념당 '탈(脫) 장제스화' 정책에 55%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57%가 '사회 대립을 야기한다' 라고 답했다(中國時報 2017/02/26).

한편 중국과의 관계에선, 대만 당국이 자국 내에 중국 간첩이 5천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2017/03/14). 이를 두고 집권당인 독립성향의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정부가 국가 안보에 충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하고 나섰다(연합뉴스 2017/03/14). 따라서 대만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발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우려를 표시하며 자국의 군사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 능력을 증강시키겠다고 밝혔다(中國時報 2017/03/17). 또한 '대만' 국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대만 명칭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각계에서는 중국에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Taipei Times 2017/03/21; 중앙일보 2017/03/24 재인용). 양안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관련 법안인 '양안협정감독조례'에 대해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국민당은 민진당이 '양안협정감독조례'에 대해 성실한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Taipei Times 2017/03/21).

한편 마잉주(馬英九) 전(前) 총통이 통신보장·감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며 2011년부터 검찰에 입법원 사무실을 도청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연합뉴스 2017/03/14). 타이베이 지검 측은 법률과 행정 절차에 정통한 마 전 총통이 세계 공통적 기본 가치인 개인 정보 보호, 자유와 통신기밀 자유 및 자주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도청행위를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7/03/14).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압박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실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차이잉원 총통은 지지율 급감 속에 탄핵 압박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7/03/10). 민진당 계열의 대만 세대싱크탱크재단(世代智庫)은 2월 3일 여론조사 결과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만족도가 43.3%로 불만족을 51.8%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전했다(연합뉴스 2017/03/10).

## 대만 주요 동향

### 【대만 정당】

02월 27일

- 다시 불붙는 '대만관 역사바로세우기'... '장제스 흔적 지우기'

(연합뉴스, 02.27)

- 대만 문화부는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에 의한 원주민 학살사건인 2·28 사건 70주년에 맞춰 중정기념당에서 장제스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을 뼈대로 하는 용도 변경안을 마련 중이다. 문화부는 기념관 내 장제스를 상징하는 로고는 물론 장제스가 생전 사용한 물품 전시나 인물 안내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중정기념당은 대만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2016년 선거에서 승리하며 정권 탈환에 성공한 뒤 탈 장제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줄곧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올해는 2·28 사건 70주년과 계엄령 해제 30주년이어서 탈 장제스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28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정부의 입장이다. 차이 총통은 "부인할 수 없는 비극적 역사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며 "진상은 끝없이 규명돼야 하고 정의의 추구도 끝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당 주석 경선에 나선 하오룽빈(郝龍斌) 전 타이베이 시장은 "타이베이의 랜드마크이자 시민 휴식공간인 중정기념당은 2007년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며 "현 정부의 용도변경 추진은 범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03월 10일

- "대만에 중(中)간첩 5천여명 "주장...여당 경계심 vs 야당 "과장말라"

(연합뉴스, 03.14)

- 지난 10일 중국인 저우홍취(周泓旭·30)씨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활동자금을 받아 대만의 각계각층을 포섭하려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대만 당국이 자국 내에 중국 간첩이 5천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집권당인 독립성향의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정부가 국가 안보에 충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민진당의 튀즈정(羅致政) 입법위원은 국가안전법을 더욱 강력하게 수정해야 한다면서 조사국, 군정보국 등 관련 기관의 모든 간첩 정보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튀 위원은 간첩 활동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보방공작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방공작법은 차이잉원 총통이 수차례 법제화를 강조해온 것으로, 중국에 기밀 유출시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 야당

은 반발하고 나섰다. 차이정위안(蔡正元) 국민당 정책위원장은 법 제정 후 관련 인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내쫓은 뒤 대만 독립 세력을 기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둔한 수법을 쓰는 민진당은 대만독립경비본부를 설립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며 비꼬았다. 대만의 중국시보는 자국내 간첩 5천명 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면서, 이들이 어디서 어떤 간첩활동을 하는 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 숫자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03월 20일

● '양안협정감독조례' 여야 마찰

(Taibei Times, 03.21)

- 입법부는 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질의응답시간에 장샤오웨이(張小月) 대륙위원회 주임과 '양안협정감독조례'에 대해 갈등을 빚었다. '양안협정감독조례'는 민간의 참여로 중국과 대만 협정에 대한 행정부 수행을 감독하자는 취지의 법규로 2015년부터 입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민당 의원 쟡밍쥙(曾銘宗)은 민진당이 '양안협정감독조례'에 대해 성실한 실행을 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그는 "의회와 민진당은 이 조례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어떠한 실질적인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가 집행하는 협상을 감독하는 법안이 의회의 초안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은 모순적인 행동이다"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장샤오웨이 대륙위원회 주임은 "우리는 입법부가 개방성, 투명성,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길 원하기에, 우리들만의 버전의 조례 초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진당은 "양안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할 때 이문제가 현재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민진당이 검토를 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러한 법이 현실에서 실행되기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 【대만 선거 · 의회】

03월 14일

● 마잉주 전 총통 기소한 대만검찰 "통신보장 · 감찰법 위반"

(연합뉴스, 03.14)

- 대만 마잉주 전 총통이 통신보장 · 감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마 전 총통은 2011년부터 검찰에 입법원 사무실을 도청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이베이 지검 측은 법률과 행정 절차에 정통한 마 전 총통이 세계 공통적 기본 가치인 개인 정보 보호, 자유와 통신기밀 자유 및 자주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도청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지검 측은 마

전 총통이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황스밍(黃世銘) 검찰총장은 장이화(江宜樺) 행정원장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으며 장 전 원장은 총통부 뤼즈창(羅智強) 부비서장과 긴밀한 관계였다고 밝힘으로써, 마 전 총통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마 전 총통 측의 이런 행위는 사법과 정치의 경계를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해 커 위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마 전 총통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고법원 검찰서 특별 검사팀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커젠밍(柯建銘)과 왕진핑(王金平)간 통화내용에 대한 불법녹취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마 전 총통과 황 전 검찰총장의 기밀누설 혐의 등을 조사해왔다. 이후 통신보장·감찰법 위반 및 기밀유출죄로 1년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 전 총장은 도청한 모든 내용을 마 전 총통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03월 17일

- 대만 국방백서, 첨단무기 독자적 개발 선언..."중국과의 긴장감 고조"

(中國時報, 03.17)

- 대만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발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우려를 표시하며 자국의 군사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 능력을 증강시키겠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4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 '국방계획 총검토(四年期國防總檢討 QDR) 2017년판'에서 외교와 재정상의 제약으로 대만이 첨단 무기들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독자적인 개발과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이 국방비를 계속 증강하고 있고, 군 개혁과 무기장비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군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서는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 부근에서 최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대만도 "철저 방위와 국토안전 확보를 위해 군비를 확충, 억지력과 연합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관해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단거리-수직이착륙기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고 잠수함을 자체 생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 대만에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03월 17일

- 대만을 대만이라 부르지 못하고..."싸우지도 못하고 중국에 항복했다"

(Taibei Times, 03.21; 중앙일보, 03.24 재인용)

- 대만에서 '대만' 국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대만 명칭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각계에서는 중국



에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만 영자지 타이베이타임스는 "차이잉원 정부의 관료들이 대만 국호 사용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이는 대만을 외교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는 것으로 많은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싸움조차 안 하고 중국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국제 사회와 대만 국민은 중국에 무기력하게 항복한 정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힐난했다. 최근 재점화된 국호 논란은 지난 17일 린더푸(林德福) 신임 체육서장이 입법원에서 "국제 스포츠대회에 대만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촉발됐다. "이는 부득이한 선택"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최근 천슈중(陳時中) 위생복지부장이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총회에 참석할 때 대만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을 회피한 것도 논란을 가중시켰다. 반중정서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위 관료들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만인들은 "정부가 치욕을 바로 잡지 않고 중국이 원하는대로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위에 나섰다. 범야권 정당인 대만단결연맹(台聯黨, 대련당) 소속 의원들도 "앞으로 닥칠 모든 곤란에도 다 '부득이한 선택'을 할 것인가"라며 정식 국호를 되찾을 것을 촉구했다.

## 【대만 여론】

02월 26일

- 중정기념당 '탈(脫) 장제스화', 55%가 반대

(中國時報, 02.26)

- 차이 정부의 이행기정의 실현의 일환인 중정기념당 '탈 장제스화' 정책에 55%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이 정부가 중정기념당에서 장제스 관련 전시와 기념상품 판매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26.5%가 찬성, 55.8%가 반대하였으며, 17.7%는 의견없음 혹은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민진당 지지자 중 '찬성' 비율이 56%에 달했으나, 반대 비율도 33.6%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20.7%, '반대'가 53.5%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차이 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사회 이행기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21.2%가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고, 57%가 '사회 대립을 야기한다', 21.8%는 의견없음 혹은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03월 10일

- [대통령 탄핵] 총통 탄핵 여론 많은 대만, 비상한 관심 보여

(연합뉴스, 03.10)

- 차이잉원 총통이 지지율 급감 속에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대만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상당수 대만 네티즌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아시아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 중 한 명인 차이 총통 국정수행에 대한 불만과 연관시켰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압박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실물 민생경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따른 불만으로도 분석된다. 청년 실업, 최저임금 문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대만에서도 차이 총통이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추이(邱毅) 전 국민당 입법 의원은 "차이 총통도 박 대통령 상황을 지켜보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차이 총통이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남은 임기는 길어야 2년"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의 대표적 여론조사기관인 대만지표민조(台灣指標民調)는 지난해 12월 차이 총통의 국정수행 만족도가 30%대로 떨어진 월례조사 결과를 내놓은 이후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민진당 계열의 대만세대싱크탱크재단은 지난 3일 여론조사 결과 차이 총통에 대한 만족도가 43.3%로 불만족을 51.8%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 이행기 정의와 사회통합

과거 1947년 장제스 중국국민당 정권이 대만 주민들을 대량으로 살해한 '2·28 사건'에 집권세력이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2·28사건은 국민당의 착취와 비민주적 폭압정치에 대만민중이 저항하고 이를 과도하게 진압하여 대만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대만 현대정치의 아킬레스건으로,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2·28사건 발생 70주년을 맞아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해결방향을 제시했다(오마이뉴스 2017/03/02).

차이 총통은 기념식에서 2·28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이행기의 정의 조례 초안(과거청산법)'을 입법원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화해는 진상규명을 전제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겨레 2017/03/01). 그는 장제스 전 총통을 기리는 중정기념당에서 장제스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을 뼈대로 하는 용도 변경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국민당은 "타이베이의 랜드마크이자 시민 휴식공간인 중정기념당은 2007년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며 "현 정부의 용도변경 추진은 범법 행위"라고 비난했다(聯合報 2017/02/27; 연합뉴스 2017/02/27 재인용).

차이 정부의 '이행기 정의'가 문제가 되는 주된 이유는 이를 시행하는 인물들이 특정 정치입장과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어있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과 '탈 장제스화' 움직임이 명목적으로만 '이행기 정의' 실현이라는 것이다(주타이빼이대표부 2017/03/03). 양안 당국 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은 차이 정부의 행동을 '탈 중국화'의 일환으로 문화독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주타이빼이대표부 2017/03/03).

이러한 행보는 실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지도가 지속 하락하고 있는 차이 정부(연합뉴스 2017/03/10)에 있어 민진당 지지 세력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일이다(주타이빼이대표부 2017/03/03). 그러나 차이 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사회 이행기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7%가 '사회 대립을 야기한다'라고 답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였다(中國時報 2017/02/26). 사회 통합에 관한 독일의 통일사례를 살펴보면 정치·경제적인 통합을 넘어 그것을 튼튼하게 떠받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뉴시스 2016/05/17). 그중 역사 청산 문제는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따라서 대만의 '이행기 정의'가 당장은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얻고 여야 갈등을 유발할지라도, 그 해결 과정을 통해 보다 견고한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뉴시스. 2016.05.17.  
연합뉴스. 2017.02.27.  
\_\_\_\_\_. 2017.03.10.  
오마이뉴스. 2017.03.02.  
한겨레. 2017.03.01.  
주타이베이대표부. 2017.03.03.  
聯合報. 2017.02.27.  
中國時報. 2017.02.26.

## 싱가포르 동향 개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김진주

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현재 제13대 의회가 2015년 9월 선출되어 임기를 지내고 있다. 2015년 9월 총선에서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이 69.86%의 득표율로 총 89석 중 83석을 확보하였으며, 인민행동당의 리셴룽(李顯龍·Lee Hsien Loong) 총리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리직을 수행중이다(Kotra 2017).

싱가포르 의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정부가 제안한 물 가격 인상안을 담은 2017년 예산안과 인지세, 컴퓨터 사이버 보안, 에너지 절약 법안 등과 관련하여 토론하였다(싱가포르의회 2017). 그밖에 3월 의회 회의에서는 소수 집단, 민족을 위한 위원회 구성,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의회 회의에서 3월 8일 수요일 싱가포르 총리실 장관인 찬춘싱(陳振聲·Chan Chun Sing)은 지난 두 회기 동안 통과된 법안 중 대통령령 소수민족 권리 위원회(The Presidential Council for Minority Rights, PCMR)에 보고된 것이 없다고 발표했으며, 9일 목요일 문화공동체유소년 장관 그레이스 푸 하이 이엔(傅海燕·Grace FU Hai Yien)은 정부가 새로운 싱가포르 보안 커뮤니티 네트워크로써 싱가포르의 모든 종교단체와 연결하여 테러 공격을 받을 시 예배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The Straits Times 2017/03/08; 2017/03/09). 한편 같은날 의회는 의회 내 말레이시아/이슬람 출신 전문가, 관리자, 임원, 기술자들을 도울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다(The Straits Times 2017/03/09).

이번 회기에서 주요 야당인 노동당(Work's Party, WP)은 정부가 내세운 2017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 가격 인상안에 대해 관련 토론회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정부가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Today 2017/03/01). 노동당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집권당인 인민행동당 의원들 역시 물 가격 인상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여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Mothership 2017/03/04).

한편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민들은 경찰서비스와 같은 공무원의 서비스에 대해 매우 높은 신뢰를 보이며 만족을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일 금요일 의회 연설에서 내무부 장관 겸 법무부 장관 카시비스와나판 산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 SC)은 2016년 4,800명의 싱가포르인과 영주권자를 조사한 결과 88%가 경찰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싱가포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신뢰는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The Straits Times 2017/03/03).

## 싱가포르 주요 동향

### 【싱가포르 정당】

02월 27일

- 야당의 베테랑인 싱가포르 인민당(Singapore People's Party, SPP) 창립자인 신극통(沈克栋 · Sin Kek Tong)이 사망했다.

(The Straits Times, 03.01)

- 싱가포르 인민당을 창당하고 정치계에서 20년 이상 6번의 총선에 출마한 야당 정치인인 신극통이 2월 27일 별세했다. 신 총재는 싱가포르 민주당(the Singapore Democratic Party, SDP)에서 1988년 선거를 나왔고 이후 싱가포르 민주당을 떠나 싱가포르 인민당을 창립하였다.

02월 28일

- 노동당의 물 가격 인상에 대한 요구

(Today, 03.01)

- 싱가포르 노동당 의원들이 28일 물 가격 인상에 대해 발표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산안 토론회에서 30%에 임박하는 가격 인상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주 재무부 장관 헝스위킷(王瑞杰 · HENG Swee Keat)은 2017년 7월과 2018년 7월에 2단계로 물 가격이 30% 향상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수자원 확보가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당국은 담수화 비용과 국가차원의 수자원 확보 방안인 "뉴워터(Newater)" 생산 비용을 반영하여 책정한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 노동당의 레온 페레라(贝理安 · Leon Perera)와 데니스 탄립팡(陈立峰 · Dennis Tan Lip Fong)의원은 물 가격을 인상하는 시기가 경기 순환보다 정치 주기에 더 일치하고 있는 듯 하다고 지적하였다.

03월 24일

- 인민행동당의 여성의 날개와 여성단체(PAP Women's Wing and BoardAgender)는 필수적으로 다양한 목표설정을 추구한다.

(Business Times, 03.24)

- 인민행동당의 여성의 날개와 여성 단체는 다양성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을 싱가포르 기업 지배 구조법을 필수 구성 요소로 삼고 권고안을 발의했다. 권고안은 기업들은 자신이 선택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2020년까지 최소한 20%의 여성을 이사회에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싱가포르 여성들의 가족, 기업 사회 및 경제에 대한 기여는 입증되지만 사회차

원에서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며, 싱가포르 내 기업 이사회에 소속된 여성의 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싱가포르 화폐은행(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번 방안을 권고하고 나섰다.

## 【싱가포르 선거 · 의회】

03월 08일

- 의회: 의회의 지난 2번 회기 동안 어떤 인종이나 종교 단체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법안은 없다.

(The Straits Times, 03.08)

- 3월 8일 수요일 싱가포르 총리실 찬춘싱 장관은 지난 두 회기 동안 통과된 법안 중 대통령령 소수민족 권리 위원회(PCMR)에 보고된 것이 없다고 발표했다. 협의회는 인종 또는 종교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에 집중하는 것이다. 협의회 의원들은 문제가 되는 법안에 대해 제안된 법률을 변경하거나 제안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안은 이사회에 제출되기 전에 3단계의 확인과정을 거친다. 확인과정 중에 법안이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줄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03월 09일

- 의회: 말레이/무슬림 전문가, 관리자, 임원, 기술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

(The Straits Times, 03.09)

- 의회는 말레이/이슬람 출신 전문가, 관리자, 임원 및 기술자들이 불확실한 경제에서 역풍을 견뎌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무슬림 부서 담당인 야콥 이브라힘(YAACOB Ibrahim) 장관은 성장하는 그룹을 재훈련하고 고용 좌절로부터 돕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히며 위원회 의장은 무하마드 페이살 이브라힘(Muhammad Faishal Ibrahim)이 맡게 된다. 야콥 장관은 좋은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겠다고 말했다.

03월 09일

- 의회: 새로운 네트워크는 테러와의 공격을 돕기 위해 종교 단체를 연합.

(The Straits Times, 03.09)

- 9일 목요일 문화공동체유소년 장관 그레이스 푸 하이 이엔은 정부가 새로운 싱가포르 보안 커뮤니티 네트워크로써 싱가포르의 모든 종교단체와 연결하여 테러 공격을 받을 시 예배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네트워크는 선거구 수준에서 인종 및 종교적 조화를 촉진하고 종교 단체와의 정부의 동반 관계를 강화하는 인종 간 종교 신앙 단체들 (the Inter-Racial and Religious Confidence Circles, IRCCs)의 활동을 보완할 것이라고 하이 이엔 장관을 덧붙였다. 그는 부처는 공동체 조직과 협력하여 다민족,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상호 존중하는 환경에서 일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세계적으로 불확실성과 분열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03월 16일

● 토니 탄 켝 얄(陳慶炎 · Tony Tan Keng Yam) 대통령이 예산 2017에 녹색 불을 붙였다.

(The Straits Times, 03.17)

- 토니 탄 대통령이 16일 2017년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정부가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대한 지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내었다. 탄 대통령의 동의는 다양한 부처에 지출 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된 지 일주일 후에 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특별송금을 포함해 총 정부지출이 750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 대통령은 대통령 고문위원회(Council of Advisers, CPA)의 조언을 듣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경제에 영향으로 인해 무역 및 투자가 둔화될 수 있지만 기술의 발전은 계속해서 촉매제가 될 것이며, 기업과 사람들은 기술을 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03월 17일

● 싱가포르, 언론 자유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를 반박함.

(The Straits Times, 03.17)

- 정부는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가 싱가포르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도한 기사에서 2014년 사건을 인용한 것에 있어 시위자 집단에 대해 조치를 취한 이유를 다시 밝혔다. 당시 시위대는 자선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싱가포르 고등 판무관(High Commissioner) 푸 치 흐시아(Foo Chi Hsia)은 서면을 통해 그들은 정부를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자선행사를 방해해서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2014년 한 블로거를 포함해 싱가포르인 6명은 자선행사가 있는 공원에서 정부의 세금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10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서면에서 3월 11일에 실린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에



서 싱가포르에서 언론에 자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싱가포르 인들은 국제 뉴스를 포함하여 정보와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법부가 언론의 자유로 인해 폄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싱가포르 여론】

03월 03일

- 의회: 설문조사에서 경찰이 세계 수준의 범죄 투쟁 조직이라는 응답이 87%로 나타났다.

(The Straits Times, 03.03)

- 싱가포르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범죄의 싸우는 조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87%에 달한다고 산무감 장관이 금요일 의회 연설에서 밝혔다. 그는 90%의 응답자가 경찰이 주요 법 및 명령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래의 안보 필요성에 대해 대응할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답했다. 2016년 4,800명의 싱가포르인과 영주권자를 조사한 결과 88%가 경찰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92%는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안전과 보안을 좋음 또는 매우 우수함으로 평가했으며, 그는 이러한 결과는 싱가포르인들의 경찰에 대해 갖는 높은 믿음과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부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 것이며, 이번 조사는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인해 싱가포르 국민의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드러난 결과라고 밝혔다.

### 사회통합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와 정당의 노력

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직접선거를 통해 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1965년 독립되었을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당우위 패권정당체제를 가지고 있다(임성학 2003). 현재 싱가포르에는 인민행동당과 노동당, 국가단결당(National Solidarity Party), 싱가포르 민주당, 개혁당(Reform Party)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2015년 9월 총선 결과에 따라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이 전체 89개 의석 중 83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야당인 노동당에서만 6석을 확보해 제13대 의회가 임기를 수행중이다(Kotra 2017).

이렇듯 인민행동당은 이번 제13대 의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의회에서 약 80석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해왔으며(외교통상부 2012), 의원내각제에서 실제 국가의 수반의 역할을 하는 총리와 헌법에 의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역시 인민행동당 소속이거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Kotra 2017). 이에 따라 싱가포르를 독재 정권, 권위주의라 말하기도 한다(Ortmann 2011). 하지만 일당우위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와 집권당 인민행동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의 자체적인 노력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16년 11월 싱가포르 의회는 장기간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인종그룹을 대상으로 인종 간 통합을 위해 단독으로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헌안을 가결 처리했다(연합뉴스 2016/11/10).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는 인구 구성비를 보면 중국계가 74.7%이고, 말레이계가 13.6%, 인도계가 8.9%를 차지한다(연합뉴스 2016/11/10). 따라서 중국계의 영향이 크지만 2017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이후 단 한 번도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말레이시아계가 단독으로 후보를 내게 되었다(연합뉴스 2016/11/10). 또한 의회 내에서는 말레이시아/이슬람 출신 전문가, 관리자, 임원, 기술자들을 도울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였다(The Straits Times 2017/03/09). 싱가포르 정부 역시 대통령령 소수민족 권리 위원회(PCMR)를 두고 의회에서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줄지 여부를 상시조사하고 있으며(The Straits Times 2017/03/08), 모든 종교단체와 연결하여 테러 공격을 받을 시 예배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싱가포르 보안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The Straits Times 2017/03/09).

지난 제13대 총선 당시 권위주의라는 비판과 일당의 장기집권에도 불구하고 인민행동당의 득표율은 약 70%에 달했으며(Kotra 2017), 싱가포르의 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약 88%의 국민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The Straits Times 2017/03/03). 권위주의, 일당 독재라는 여러 비판 속에서도 이와 같은 국민의 높

은 신뢰와 지지는 싱가포르 정부와 정당이 자체적으로 끊임없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수 민족 그룹의 사회통합과 그들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수행 중인 싱가포르 정부와 정당의 이러한 사례는 사회통합과 국민의 정치신뢰 제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연합뉴스. 2016.11.10.

외교통상부. 2012.06.

The Straits Times. 2017.03.03.

\_\_\_\_\_. 2017.03.08.

\_\_\_\_\_. 2017.03.09.

\_\_\_\_\_. 2017.03.09.

임성학. 2003. "아시아 민주주의의 비교분석과 공고화." 『한국사회과학』 25권, 191-211.

Ortmann, S. 2011. Singapore: Authoritarian but newly Competitive. *Journal of Democracy* 22(4): 153-164.

Kotra. 2017.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0> (검색일: 2017.03.26.)